

---

평등하고 안전한 일상,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

# 여성가족부 2021년 업무계획

---

2021. 2. 2.







## 목 차



I. 여성가족부 4년 추진성과 .....	1
II.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.....	6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8
1. [평등]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.....	8
2. [안전] 여성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.....	11
3. [포용]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.....	14
4. [참여]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.....	17



# I. 여성가족부 4년 추진성과

## 1 성평등 사회 실현 및 경력단절 예방

### □ 추진실적

#### ① (성평등 정책) 8개 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('19.5월~)를 통한 정책 개선

- ▶ (교육부) 국·공립대 교원임용시 특정 성별 3/4(75%) 초과 금지('20.1월)
- ▶ (문체부) 스포츠윤리센터 설립('20.8월)
- ▶ (대검찰청) 검찰직 양성평등 교과목 신설('20.1월)

#### ② (여성대표성 제고) 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('18~'22)」 수립('17.11월)

및 이행점검, 민간 기업 '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' 업무협약('19년~) 체결\*

\* '19.4월~'20.12월 기준 민간기업과 48건의 MOU 체결(총 100개 기업 참여)

#### ③ (경력단절 방지)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\*, 경력단절여성

취업 위한 30·40대 경력자 특화교육 및 온·오프라인 훈련(60여개) 신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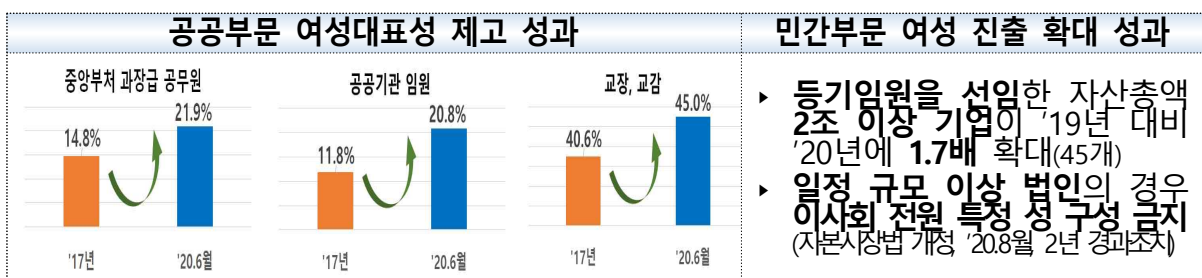
\*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수행기관 : ('17년) 15개 → ('20년) 60개

### □ 정책효과

#### ① (여성대표성 제고) 공공 12개 목표분야 중 8개 분야 목표 조기 달성\* ('20.상반기), 민간 상장법인 여성임원비율 및 선임기업 확대\*\*

\* 공공분야 본부 과장급·공공기관 임원의 여성참여비율은 '19년 최초로 20% 상회, 국토·건설·과학기술 등 그간 여성 참여가 희소했던 분야에서도 여성 진출 사례 증가

\*\* 상장법인(2,148개, '20.1분기 기준) : 여성임원 4.5%, 여성임원 선임기업 33.5%



#### ② (경력단절 방지)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및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감소 및 여성 고용유지 강화

- ▶ 경력단절여성 규모 : ('16년) 1,924천명(20.5%) → ('19년) 1,699천명(19.2%) → ('20년) 1,506천명(17.6%)
- ▶ 여성 고용률(15~64세) : ('16년) 56.1% → ('19년) 57.8% → ('20년) 56.7%\*
- ▶ 여성 경제활동참가율(15~64세) : ('16년) 58.3% → ('19년) 60.0% → ('20년) 59.1%\*

\* '16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, '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고용률과 경제활동 모두 하락

## ②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

### □ 추진실적

- ① (기반 구축)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('19.12월 시행), 「성희롱·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」 운영('20.1월~)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기반 마련
- ② (디지털 성범죄) 불법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24시간 상담 지원 강화\*,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양형기준 마련\*\* 등
  - \*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('18.4월~) 지원 : '20.1~9월 10만건(전년 동기 대비 16.9% 증)
  - \*\*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('17.9월),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('20.4월)
- ③ (아동·청소년 성보호) 성매매 대상아동·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('20.5월), 아동·청소년음란물을 '성착취물'로 변경('20.6월)
  - '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·열람 대상자'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('20.12월)
- ④ ('위안부' 피해자 기념사업) 일본군 '위안부' 문제 연구소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('20.8월),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협력 연구, 국제학술대회 개최('20.12월)

### □ 정책효과

- ① (피해율 감소) 범정부 대책 추진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율\* 등 감소
  - \* ('16년→'19년) 배우자 폭력피해 경험률 1.8%p 감소
- ② (인식 변화) 가정폭력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확산(77.6→81.5%) 및 촬영물 비동의 유포 시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(86.3→90.4%)
- ③ (만족도 제고) 자립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로 피해자 만족도 제고\*
  - \* 시설 이용자 만족도 : 가정폭력 ('19년) 92.6→('20년) 93.7점 성매매 ('19년) 87.3→('20년) 87.5점



### ③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참여기반 조성

#### □ 추진실적

- ① (위기청소년) 시·군·구 청소년안전망팀 신설('20년 9개소) 및 전담공무원 신규 배치('20년 97명)로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 강화\*

\* △ (상담복지센터) ('17년) 224개소 → ('20년) 236개소 △ (쉼터) ('17년) 123개소 → ('20년) 135개  
△ (청소년동반자) ('17년) 1,146명 → ('20년) 1,349명

- ② (학교 밖 청소년)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, 건강검진, 무료 급식 지원,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을 통한 수시 입학 지원('20년)

- ③ (청소년 보호) 인터넷 중독 지원, 신종 불법·유해사이트 차단 등 변화하는 유해환경에 대응,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강화\*

\* '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' 수립('19.5월),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확충('20년 54명),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('20.9월),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전국 확대('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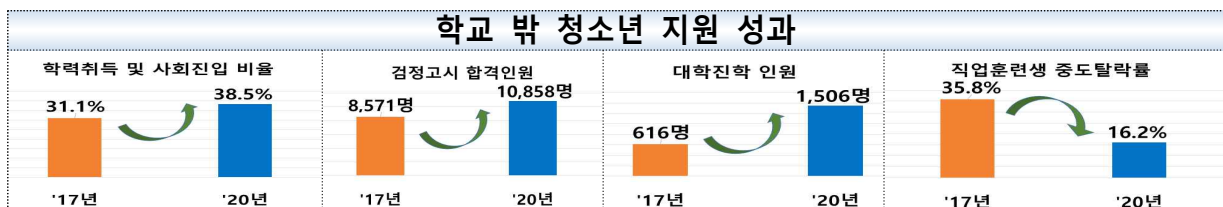
- ④ (청소년 참여기반)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반 구축\*,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('23년, 전북 새만금) 유치('17년), '한-아세안 청소년 서밋' 개최('20년) 등 교류 기회 확대

\*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 위촉, 원탁토론회 개최 등('20년)

#### □ 정책효과

- ① (위기 완화) 청소년의 위기 수준 완화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효과성 제고

- ▶ 청소년안전망 효과성(서비스 지원 위기변화도) : ('17년) 20.4% → ('20년) 20.9%
- ▶ 청소년동반자 제도 이용건수 : ('17년) 95만건 → ('20년) 132만건
- ▶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 실적('18년 신규) : ('18년) 32,822건 → ('20년) 71,004건



- ② (청소년 참여)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 반영 및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제고

- ▶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제안 : ('17년) 24/30 → ('20년) 32/33 과제 반영 (일부수용 포함)
- ▶ 한-아세안 청소년 서밋('20.11월) : 11개 국가 110명 청소년 참여, 청소년 주도 권고문 채택발표

#### ④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강화

##### □ 추진실적

##### ① (아동양육비 지원)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및 연령 확대



- 아동 출생신고 전 미혼부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\*('20.9월), 임신·출산 지원 등 「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\*\*」 발표('20.11월)

\*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임을 증명한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양육비 지원('20.9월~)

\*\* 미혼모 등 한부모 임신·출산 지원, 차별 제도 개선, 양육지원 강화 등 전반 지원 강화

##### ② (주거 지원)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(매입임대) 주거지원 확대\*

\* ('17년) 12개 기관, 136호 → ('20년) 16개 기관, 189호

##### ③ (양육비 이행)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(합의, 추심, 소송 등) 제공 및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법·제도 개선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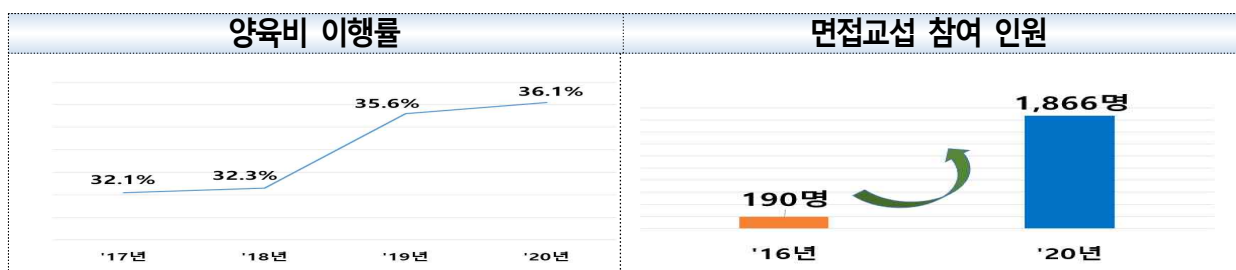
\* 운전면허 정지처분, 신용·보험정보 조회 등 양육비이행법 개정('20.6월),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 요청, 명단공개, 형사처벌 등 양육비이행법 개정('20.12월)

##### □ 정책효과

##### ① (양육부담 완화)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금액 확대,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증가\*

\* 아동양육비 수혜인원: ('17년) 7.8만명 → ('20년) 13.8만명

##### ② (양육이행 책임 강화) 양육 한부모의 1회 신청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비 이행을 증가





## 5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지원 강화

### □ 추진실적

- ① (돌봄공동체)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을 위한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('20년 신규), 마을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
- ② (가족센터) 주민 소통 및 가족서비스 제공 기반인 가족센터 건립 확대



- ③ (아이돌봄서비스)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비용 부담 완화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대폭 확대, 이용 편의 위한 모바일 앱 도입('20년)



### □ 정책효과

- ① (지역돌봄 확대) 공동육아나눔터, 돌봄 공동체, 가족센터 등의 확대를 통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 및 선순환 환경 조성
- ② (돌봄부담 완화)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('17년 63,546가구 → '19년 70,485가구) 및 신청 대비 이용률 증가\*를 통해 가정 내 양육부담 완화

\* 시간제 : ('17년) 77.2% → ('20년) 91.4% / 종일제 : ('17년) 93.0% → ('20년) 96.2%

## II.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### 1. 업무추진 여건

#### 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·가족·청소년 위험 증대

- 성별 업종 분리, 여성에의 돌봄 집중 등 노동시장에 누적되어 온 성 격차의 결과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더욱 크게 발생\*

\* 여성 고용률 : 56.7%(‘20년 기준, 전년 대비 1.1%p 감소 / 남성은 0.9%p 감소)

여성 취업자 : 1,152만명(‘20년 기준, 전년 대비 약 14만명 감소 / 남성은 약 8만명 감소)

- 가족 간 의사소통 단절, 이혼, 자녀 가출 등 가족 해체 우려로 인해 한부모가족 및 위기청소년 지원, 가정폭력 방지 등에 대한 요구 증대\*

\* 여성 40.6%, 남성 32.7%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갈등 경험(한국여성정책연구원, ‘20.7월)

- 랜덤채팅앱 등을 활용한 아동·청소년 성범죄, 미디어 과의존 심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 발생 및 비대면 청소년 상담\* 증가

\* 사이버 상담 건수 : (‘19.3 ~ 12월) 208천건 → (‘20.3 ~ 12월) 281천건(+35.1%)

#### □ 사회 곳곳에서의 차별적 제도와 문화 개선 필요 상존

- 여성 대상 문지마 폭력, 데이트 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및 성차별 인식에 대한 격차 지속 발생

-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형태 변화 및 가족 가치관 급변\*에도 여전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여전\*\*

\* 가족 가치관 변화 : (동거 동의) (‘10년) 40.5% → (‘20년) 59.7% (비혼 출산) : (‘10년) 20.6% → (‘20년) 30.7%

\*\* 가족 관련 기본법인 「건강가정기본법」은 여전히 '혼인·혈연·입양' 중심의 가족 개념 유지

#### □ 성희롱·성폭력 등 여성폭력 유형의 다양화

- 텔레그램, 유튜브 방송 등 새로운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, 그 방식 등이 다양\*해지고 있으며, 저연령 피해자 다수 발생\*\*

\* 지난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경험 11.1%, 성적 대화 유인이 9.3%로 가장 높은 비율, 만남까지 유인된 경험은 2.7% (‘19 성매매 실태조사, 여가부)

\*\*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령별 피해자 비율 : 10대(23%), 20대(20%) (‘20.1.1~9.30)

- 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가 어려운 조직문화의 변화 필요성 제기

## 2. 업무추진 방향

###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,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

#### 정 책 목 표

#### 실 천 과 제

**[평 등]**  
다함께 누리는  
성평등사회 실현

- 성평등 총괄·협력 체계 및 정책 개선 강화
-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 환경 조성
-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및 여성 일자리 기반 강화
- 사각지대 없는 여성 고용안전망 구축

**[안 전]**  
여성폭력으로부터  
안전한 사회 구현

- 여성폭력 방지 총괄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
-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
- 아동·청소년 성범죄 대응 및 공공부문 예방교육 강화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공공성·투명성 강화 및 인권 공감대 확산

**[포 용]**  
다양한 가족  
차별 해소 및  
촉촉한 돌봄지원

-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이행 강화
-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
- 지역사회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공백 해소

**[참 여]**  
청소년 안심 환경  
조성 및 참여 확대

- 위기청소년 등 지원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
-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강화
- 청소년 주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
-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 기반 개선

## II.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1

### [평등]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

◆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**실질적인 제도 개선**을 통해 **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**할 수 있는 성평등사회 구현(국정과제 66번)

#### 1 성평등 총괄·협력 체계 및 정책 개선 강화

- (정책 개선)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통해 교육·문화·복지·고용 등 영역별 법령·홍보물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 점검·개선
- (효과성 제고)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위한 성 주류화 제도 실효성 강화
  - (성별영향평가) 평가의 질 제고 및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대상과제 선정부터 정책개선 이행, 대국민 홍보까지 추진체계 효과적 개선\*
  - \* 부처별 개선 과제 선정 → 평가지표 개선 → 특정평가 보고회 등 개선안 공론화 → 우수사례 홍보
  - (성인지 예산) 정책 분야별 성평등 효과 분석 강화, '성인지 예결산 전문 평가위원회' 신설 등 기능 강화
- (국제협력) 성 주류화 제도 구축 등 아태 지역 성평등 정책 선도국가로서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'(가칭)UN Women 지식센터\*' 설립 추진
  - \* 성평등·여성평화안보 분야 ▲연구개발 ▲젠더전문가 등 교육훈련 ▲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추진

#### 2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 환경 조성

- (성평등교육 확산) 언론·의료·체육계 종사자 등 직무 특성을 고려한 미디어형 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 및 「성평등과 인권」 협업교과서 개발
- (지역 문화 확산) 지역의 생활 속 성평등 체감환경 조성 위한 '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' 신규 운영으로 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확대\*
- \* 지역 양성평등센터 : ('20년)4개소 → ('21년)5개소(기초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센터 신규 설치)

- (성평등 조직문화 조성)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제도 이행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'(가칭) 양성평등전략추진단' 구성
  - 지역 산단 기업 성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신규 지원\*(25개, '21년~)
    - \* '21년은 경북 지역 기업 지원, 추후 단계별 지역 확대 추진
- (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) 주체적인 여성 역사 발굴·재조명 및 성별·세대·가족을 아우르는 교육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\*(~'23년)
  - \* 여성계·건축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'박물관 설립자문위원회' 구성·운영('21년~)
- (청년 참여) 20·30 청년 주도 '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' 운영 지속

### 3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및 여성 일자리 기반 강화

- (여성대표성) 공공 및 민간 성별다양성 확보 및 성과 확산 추진

구 분	주요 내용
공공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3.8 세계 여성의 날' 및 양성평등주간(9.1~9.7)과 연계,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주요 성과 및 정책 집중 홍보(3월, 9월)</li> </ul>
민간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업 성별임원 현황 개선도 조사·공표(8월) 및 여성임원 확대 선진사례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(9월)</li> </ul>
여성인재 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풀 확보 및 공공부문 여성인재 추천 등 적극적 활용 추진</li> </ul>

- (고용정책 기반) 여성고용 확산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정책적 기반 구축
  - '여성 고용정책 개선 민-관 정례 협의체' 개최
  -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 일자리 취약성 해소와 대응력 제고 관련 (가칭) 「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」 수립(3월)
  -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'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·서비스 개발 지원 및 「여성·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」 수립(하반기)
  - '양성평등 임금의 날' 최초 시행 계기, 노동시장 성별 임금 격차 조사 발표(9월), 기업 등에 대한 「성평등 현황 공시제」 연구 추진(~12월)

#### 4 사각지대 없는 여성 고용안전망 구축

- (고용안정) 재직여성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, 일경험과 계속고용 연계
  - 재직여성의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\*
  - \* 서비스 지원기관 : ('20년) 60개소 → ('21년) 75개소(예방 전담팀 7개소 시범 운영)
  -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의 장기 고용 유도를 위해 '새일고용장려금\*' 신설
  - \* 인턴 정규채용 기업에 대해 정규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80만원 신규 지급
- (취업지원) 수요자 중심 취업지원으로 빠른 재취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  - 다부처 협업\*으로, 각 부처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단여성에게 일경험과 취업을 연계하고,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
  - \* 전문직업훈련(과기부, 환경부 등 8개 부처) → 일경험취업연계(여가부) → 사후관리(여가부)
  -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(고용부 협업)하여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여성에게 구직기간 동안 소득지원과 함께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(미래적응형 직업훈련) 비대면 중심 사회 변화 대응,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·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 및 여성 전문인력 양성 강화
  - 전국 새일센터(158개소) 이용자를 위한 경단여성 특화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\* 및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(LMS) 구축·운영(3월~)
  - \* 무역, 공연예술, 직무소양, 창업 등 23개 특화과정 개발, 원격훈련 지원
  - 포스트 코로나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(헬스케어, 재난·방역) 및 디지털 신기술(빅데이터, AI) 등 미래 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 확대
  - 청년여성 특화 장기훈련(6개월 이상, 고급 난이도) 및 무급휴직자 등 위기 사업장 종사자의 직무역량과 이·전직 훈련 지원 신설
- (자살예방) '20·30대 여성 자살예방 정책지원단'을 구성·운영('21년)하여 실직 등으로 인한 20·30대 여성 자살예방 실행계획\* 수립 및 이행점검
- \*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,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등



◆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**총괄적인 방지 기반 구축**과 피해자 지원, 신종 여성폭력 체계적 대응으로 **국민 불안감 해소**(국정과제 66번)

## 1 여성폭력 방지 총괄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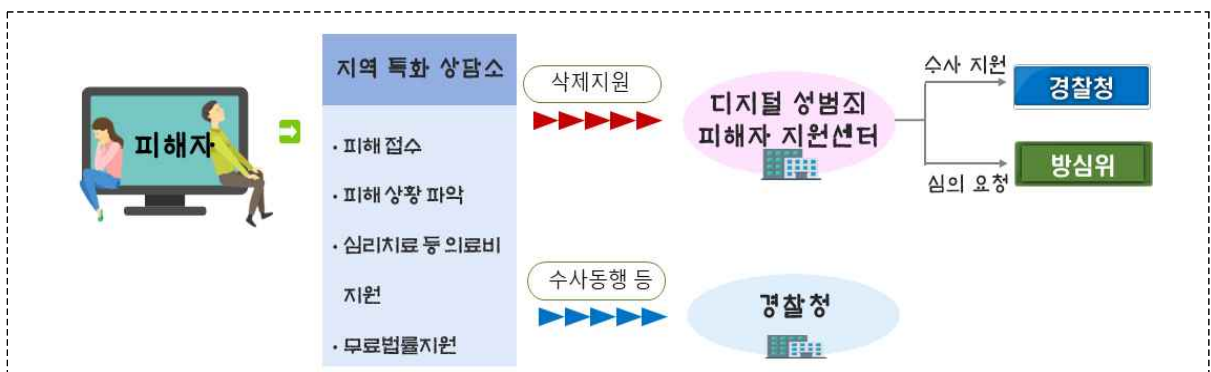
- (정책 기반)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및 여성폭력 실태·통계 관리 등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가족부 역할 구축
  -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‘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방지대책’\* 등 관련 대책 이행·점검 및 기관별 시행계획 실적 분석·평가 등 환류 강화
    - \*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, 성희롱 등 여성가족부 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등
  -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대책 총괄,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는 부서(가칭 ‘권익침해방지과’) 신설·운영(3월)
  - 데이트폭력·스토킹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신규 실시 및 여성폭력 전반 통계 체계 구축으로 관련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
- (피해자 지원) 스톱킹, 북한이탈여성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신속한 피해 회복 추진

구 분	주요 내용
지원 기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원시설·인력 확충 및 주거지원(임대주택 10호 증대)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방리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 그룹홈(각 1개소 증)</li> <li>*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력 확충(상담소 43명, 보호시설 65명 증)</li> </ul> </li> </ul>
스토킹 피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스톱킹 처벌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스톱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 등 마련(제정안 국회 계류)</li> </ul> </li> </ul>
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「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」 연구 추진(‘21.상반기~), 통일부·경찰청 등과 통합지원체계 구축</li> </ul>
성매매 피해 아동·청소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피해 발생 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, 상담, 보호, 자립·자활, 치료·회복 등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전담지원센터 17개소 설치·운영</li> </ul> </li> </ul>
인신매매 피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‘인신매매’ 개념 정의와 범부처 총괄대응체계 구축, 피해자 조기 발견·식별 및 지원 등 법률안 제정 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인신매매·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(안)」(‘20.12.24. 발의, 국회 계류 중)</li> </ul> </li> </ul>

##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

- (예방 강화)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(총15종) 및 온라인 교육 지원체계 마련(하반기),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
- (지원 확대)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 체계 내실화
  -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을 위해 「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」 인력 확충('20년 17명 → '21년 39명) 및 기능 강화\*
    - \* 불법영상물 자동 검색을 위한 연계 사이트 확충('20년 90개 → '21년 490개)
  -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 확대(대리인 포함) 및 허위영상물이나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(先)삭제 지원 근거\* 마련
    - \*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개정(국무회의 통과) '21.1월, 시행 '21.7월)
  - 지역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상담·의료·법률 지원 등 지역 특화상담소(7개소) 운영

### < 지역 특화상담소 운영(안) >



## 3 아동·청소년 성범죄 대응 및 공공부문 예방교육 강화

- (범죄 처벌) 아동·청소년 성적 유인·착취 행위인 '온라인 그루밍' 처벌 근거 마련 및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\* 추진
  - 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온라인 그루밍 처벌 관련 3건, 공소시효 폐지 관련 1건 국회 계류 중)



- (국민 편의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 외 모바일로도 고지\*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편의 증진
  - \*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미희망 및 미열람 세대주 대상으로는 後 우편고지 실시
- (성인권교육) 아동·청소년 인권 존중 등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, 학교 등에서의 '성인권 교육' 교재 전면 개편(하반기)
- (폭력예방교육) 기관별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 의무화(1월~), 적용 대상기관 단계별 확대\*( '21년 부처·지자체 → '22년 각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)
  - 고위직 대상 위계·위력에 대한 인식차를 체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, 사례 중심 특별교육 실시
  -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실태 등 지자체 전수조사 확대\*(3월~)
    - \* ('20.8월) 8개 시·도 → ('21년) 전국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시·도교육청

#### 4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권 공감대 확산

- (기반 구축)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지원의 공공성·투명성 강화
  -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「일본군'위안부'문제 연구소」 운영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전환
- (지원 강화) 생활안정지원금, 개인부담 약제·입원·진료비 등 건강 치료비와 호스피스·완화 및 장기요양 입원·치료비 지원 강화
  - \* 생활안정지원금(월) : ('20)147.4→('21)154.8만원, 건강치료비(월) ('20)86.0→('21)90.3만원
- (인식 제고) 일본군'위안부' 문제의 체계적 조사·연구,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및 미래세대 교육과 진상규명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·확산
  - 피해자 존엄회복, 여성인권·전시(戰時)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

- ◆ 한부모·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포용 방향으로의 법·제도 개선과 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(국정과제 65번)

### ①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

- (법령 정비) 가족유형별 차별 해소 위해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상 ‘건강 가정’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또는 “가족” 정의규정 삭제 등 개정\* 추진
  - \* 혼인·혈연·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 삭제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 등 변화된 환경 반영
- (기반 구축) 지역 단위에서 돌봄, 교육·상담 등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공간인 가족센터(생활 SOC) 확대\* 및 기능 강화
  - \* (‘20년) 70개소 → (‘21년) 97개소(건립 추진연도 기준)
-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\* 및 인증제 내실화, ‘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 조사’ 및 ‘가족친화수준조사’ 등을 통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
  - \* (‘20년) 4,340개사 → (‘21년) 4,800개사
- (취약·위기가족) 경제·사회적 취약·위기가족 대상 사례관리, 생활 지원, 자립지원 등 수행기관 확대 및 대상기준 완화\*(1월~)
  - \* 수행기관 : (‘20년) 79개소 → (‘21년) 88개소, 대상기준 : (‘20년) 중위소득 72% 이하 → (‘21년) 100% 이하
- (아동학대 예방) 가정폭력·성폭력상담소, 여성긴급전화1366,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아동학대 인지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 및 연계 강화
  - 아동학대 발생 가정 대상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동보호 전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, 가족상담, 사례관리\* 등 지원 강화
    - \* ‘가족서비스 포털시스템’ 통한 상담·교육 제공, 찾아가는 부모교육, 위기가정 집중 사례관리 등
  -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강화

##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및 양육비 이행 강화

- (양육 및 생활지원)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양육비 및 주거지원 확대

구 분	주요 내용
아동양육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(중위소득 30% 이하)에게도 아동양육비(월 10만원) 지급(5월)</li> <li>▶ 청년 한부모 중 그간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만 25세 ~ 만 34세 한부모에게도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급(5월)</li> </ul>
	* 자녀 1인당 → (만 5세 이하) 월 10만원, / (만 6~17세) 월 5만원
주거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부모가족 대상 매입임대주택*을 통한 주거 지원 확대</li> </ul>
	* 매입임대주택(호수) : ('20년) 189호 → ('21년) 222호

- (양육책임 이행 강화) 양육비 이행 의무자의 안정적 양육책임 이행 노력
  - 고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요청, 명단공개, 형사 처벌, 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\* 시행(7월)
  - \* 「양육비이행법」 개정('20년)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
  -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·심리적 안정 지원과 자발적 양육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(4월, 수행기관 6→10개소)

## ③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인권 보호

- (정착지원)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자립지원 패키지 및 자녀성장 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\*(1월)
  - \* 프로그램 운영기관 : ('20년) 196개소 → ('21년) 203개소
- (진로지원)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민·관 협력을 통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 컨설팅, 진학 관련 정보 제공\*(4월) 등으로 교육 격차 완화
  - \* 진로진학, 학업 동기부여, 상담 제공 및 다누리 포털 내 정보제공 등
- (인권보호) 국제결혼중개업 미등록업체 불법광고 신고창구 마련 및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강화로 상시점검 체계 강화(1월)
- (인식개선) 정부간행물, 교육자료 등 대상 다문화·인종 차별 요소 점검 컨설팅 지원\*, 공무원 등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제작(1월~)
  - \* 「다문화모니터링단(가칭)」운영 법적 근거 마련(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)

#### 4 지역사회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공백 해소

- (지역돌봄)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\*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구성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\*\* 확대 운영으로 지역 돌봄 체계 강화

\* (20년) 10개 지역, 33개 공동체 → (21년) 12개 지역, 43개 공동체

\*\* (20년) 331개소 → (21년) 395개소 / 개소당 전담인력, 추가시간제 인력 각 1인 지원

- (아이돌봄서비스 지원) 정부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상황 고려 특례 지원

구 분	주요 내용
일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(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간(연) : 720→840시간</li> <li>비율 : 종일제 가형 80→85%, 시간제 나형 55→60%</li> </ul> </li> </ul>
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(추가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저소득(중위소득 75% 이하) 한부모가족, 장애부모·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 대상 특화 지원(1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종일제·시간제 가형 미취학 85→90%, 시간제 가형 취학 75→80%</li> </ul> </li> </ul>
코로나19 특례 (추가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휴원·휴교, 원격수업 실시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,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특례 적용(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지원율 : 0~85%→40~90%(기존 미지원 대상인 '라'형에도 서비스요금의 40% 지원)</li> </ul> </li> </ul>

- (아이돌보미 전문성) 서비스 제공 전문성 강화와 안전 확보 추진

- 아이돌보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교육체계 구축(3월),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 예방 위한 '안전관리 매뉴얼' 제작(1월)
-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자격제도(가칭 '육아전문관리사') 연구\* 추진(21년)
  - \* 국가자격제도 설계·도입 관련 연구 이후 법제화 추진 계획

- (아이돌봄서비스 연계) 서비스 연계 향상 및 이용자 편의 제고

- 시·군·구 간 아이돌보미 수급 조정과 지역 간 서비스 이용의 원활한 연계 위한 '광역지원센터' 시범 운영\*(2개소, 12월)
  - \* (기존) 아동 주소지(시·군·구) 내 아이돌보미 이용 → (개선) 시도 내 아이돌보미 탄력적 연계
- 야간·주말 등 긴급·일시 연계서비스 운영(1월), 고객 대기 필요없는 자동상담 챗봇\* 운영(3월)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
  - \* 카카오톡 접속 → 아이돌봄 챗봇에게 채팅 문의 → 자동응대 시나리오 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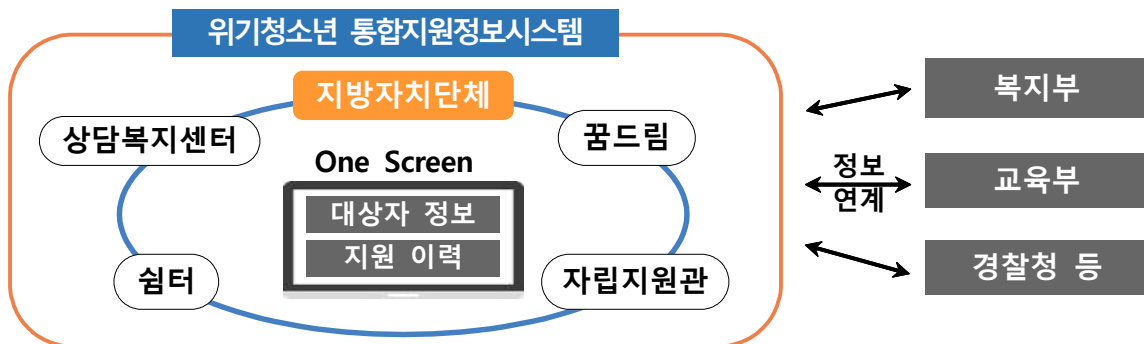
## 4

## [참여]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

- ◆ 위기청소년, 학교밖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·지원하고,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적극 지원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(국정과제 53번)

## 1 위기청소년 등 지원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

- (위기청소년) 통합 정보 제공, 지원 인프라 및 비대면 지원 확대 등으로 조기 발굴부터 자립 지원까지 전반적 지원 체계 강화
- (통합지원) 위기청소년 발굴·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 간 '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' 구축 추진('21~'23년)



- (인프라 확대)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(청소년안전망팀) 확대('20년 9개소 → '21년 15개소) 및 청소년쉼터 확대('20년 135개소 → '21년 139개소)
- (비대면 상담)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굴과 개입을 위한 사이버 상담·아웃리치 인력 확충('20년 47명 → '21년 59명)
- (실태 파악) 위기청소년의 폭력, 자살·자해, 약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 경험 여부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'위기청소년 실태조사' 신규 실시
- (학교 밖 청소년) 공적지원체제로 정보 연계 및 학습·체험활동 지원
  - (정보 연계) 학교 밖 청소년 정보를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근거 마련\* 추진

\*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2건 국회 계류 중)

- (활동 공간) 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' 및 전용공간 확대\*

\*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: ('20년) 219개소 → ('21년) 220개소/ 전용공간 ('20년) 20개소 → ('21년) 40개소

- (비대면 서비스) 코로나19로 인한 공백 방지를 위해 비대면 학업·상담 지원\* 등 온라인 중심 서비스 제공

\* 검정고시 원격강의 지원, 온라인 학습 멘토링·상담 지원, 온오프라인 급식 지원 등

○ (후기청소년) 취업 등을 앞둔 후기청소년(19~24세)의 사회적응 및 자립 지원

구 분	주요 내용
진로 설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'라이프코칭 프로그램' 확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20년 자립지원관 9개소 → '21년 자립지원관·쉼터 50개소</li> <li>* 진로, 시간관리, 경제, 대인관계, 취업, 여가 등 프로그램 제공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후기청소년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시범 실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('21년 2개 지역 내외)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('21년 기본설계) 추진</li> </ul>
자립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자립 활동비(연 50만원 이내) 및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(월 30만원) 신규 지원</li> </ul>
근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위한 상담, 현장 지원, 노동인권교육 강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비대면 상담, 카카오톡, 화상 등 활용 온라인 지원 및 교육</li> </ul> </li> </ul>

## 2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강화

- (온라인 유해환경 차단) 성매매 등 불법·유해 행위의 주요 경로인 랜덤 채팅앱 상시 모니터링, 유튜브 등 인터넷 영상물·신문 광고 점검 강화
- 청소년 유해약물(술·담배) 온라인 대리 구매,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중점 점검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
- (신종 유해환경 차단) 청소년유해물건 유통 및 체험방 홍보사이트, 대리입금(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) 거래 실태 모니터링 실시



- (치료 지원)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조절 훈련 등 비대면 치유 지원 강화
- 정서·행동문제 청소년의 효과적·시의적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 ('20년 1개소 → '21년 2개소)

### 3 청소년 주도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

- (법령 정비) 청소년 권리·참여 강화를 위한 「청소년기본법」 전면 개정
 

▶ (주요 내용) 육성·수련·지도 등 정책수행자 중심 용어를 활동·진로·참여 등 청소년 중심 용어로 변경, 청소년정책 실태조사, 청소년정책 연구사업 등의 근거 마련 등

\* '20.11월 발의, 국회 계류 중
- (실태 파악) 청소년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서의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추진(5월 발표),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확대(격년 → 매년)
- (정책 참여)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소통팀\* 확대('20년 20명 → '21년 40명), 온라인 정책제안 포털 토론기능 신설 등을 통한 온라인 토론 활성화
 

\* 홍보콘텐츠 제작, SNS 운영 등 청소년에디터 활동, 온라인 정책창구 운영 등

### 4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 기반 개선

- (국제교류) 비대면 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 주도형 국제교류 참여 기회 제공, '한·아세안 청소년 서밋' 정례화 등 정책·사례 공유 기회 확대
 - 「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('23년, 새만금)」 정부지원위원회 운영
- (활동시설 개편)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 개편,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등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개정 추진\*
 

\* '수련' 등 지도 중심 용어 삭제, 수련관·수련원 등을 '청소년센터'로 통합 등(발의 예정)
- (방과후 활동)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충('20년 304개소 → '21년 349개소), 신규 운영모형(주말형) 추가 및 운영 자율성 확대\*, 학습지원 등 긴급돌봄
 

\* 체험활동과정, 학습지원과정 중 중점 운영 선택 가능